

「충남형 주민자치 기본계획」 관련 토론요지

김 찬 배 사무관 (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담당)

- 오늘 세 분의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.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가 거듭 될수록 조금씩 나아갈 방향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바와 같이 현행 주민자치센터(주민자치위원회)는 그 태생적 한계와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‘주민자치’라는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, 「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주민자치회를 명기하고, 개편특위에서 3가지 모델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방침인데,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이 되고,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-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의 「3大 혁신과제」 중 하나가 “지방분권”입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“주민자치”에 역점을 두어 선도적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오늘 김성호 박사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중요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현재 우리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유사한 내용도 있으신데,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, 도정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.
- 현재, 우리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「충남형 주민자치 기본계획」을 간략히 설명드리고,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. 우리도에서 추구하는 주민자치는, 단순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종속되는 문제가 아니라,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“분권과 참여민주주의” 철학에 근간에 둔 지방 선진화 작업입니다.
-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정비와 행·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만,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“주민자치 의식전환”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“주민자치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,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”는 것입니다.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전혀 형성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.

- 이에 우리道에서는 15 시·군과 시·군 의회, 전 도민들을 향한 대대적인 주민자치 공감대 형성을 거쳐,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「충남형 주민자치」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.
- 현재, 道內 205개 읍·면·동 중 158개소에 주민자치센터(위원회)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센터 未설치 47개 읍·면·동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, 전 읍·면·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본으로 각 시·군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, 각 시·군 대표들로 구성된 「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」를 조직 할 예정입니다.
- 이들 각 단계의 위원회를 통해 읍·면·동(혹은 그 이하) 단위의 「마을의제」들이 道와 시·군에서 논의되고 「정책의제」로 채택 될 수 있도록, 관련 조례제정(제도적 보장) 및 주민자치사업 공모(예산적 지원) 등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(empowerment)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.
- 특별법 상, 「주민자치회」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지라도, 기존 『주민자치위원회』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,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그 제도를 오롯이 담아 낼 수 있는 그릇(역량)을 만들어야 합니다. “분권”과 “자치”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그릇을 「충남형 주민자치」 모델을 통해 시험 해 보고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.
-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충실한 학문적·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,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